

AI 워터마크 의무화 ‘동상이몽’ “기술악용 방지” vs “과잉규제”

‘AI 기본법’ 하위법령 두고 갈등
영상 전체에 AI 식별표지 삽입
정부 “딥페이크 등 사회혼란 방지”
업계 “글로벌 추세와 정면 배치”
전문가 “워터마크 무력화 대응 필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범람하는 저질 AI 콘텐츠인 ‘AI 슬롭(AI Slob)’과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에 식별표지(워터마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기술 흐름과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AI 기본법 시행령안에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를 활용한 결과물에 가시적 식별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나 가짜 뉴스, 허위 의료 광고 등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는 ‘AI 가짜 의사’,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정보 제공자는 AI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신뢰 기반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시행령 안에 포함된 AI 식별표지 삽입 의무가 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 활용 결과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AI 식별표지는 물론 눈에 보이는 표식까지 하도록 해준다.

/제미니이로 생성한 이미지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표시 의무 고시와 AI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IT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8일 과기정통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며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영상물의 경우 도입부나 말미에 단순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이 재생되는 전체 분량 내내 AI 식별표지를 삽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창작의 주체가 아닌 단순 채색, 화질 향상, 오타 수정 등 보조적 도구로 활용한 경우까지 일일이 식별 표지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감과 선입견만 심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AI 식별표지와 관련한 전 세계적 추

세는 ‘비가시적 식별표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구글 답마인드,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지에 노이즈 패턴을 숨거나 오디오 파형에 비가청 신호를 숨기는 식이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콘텐츠 출처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연합체(C2PA)를 구성해 기술 표준화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베리퍼이드마켓리서치는 디지털 워터마크 시장이 2032년 약 8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표기 의무화를 넘어,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가시성 여부에 관계없이 AI 식별표지는 삭제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구글의 ‘제미니 2 플러스’가 자사가 만든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명령 한 번에 지워 논란이 됐으며,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통계적 기법으로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무력화하는 ‘언메이커’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98개 실행과제 담은 ‘韓 AI행동계획’ 공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100일간 ‘실행중심 국가전략’ 마련 생태계 조성, 범국가 대전환 등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범국가적 청사진을 내놔다. 단순히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시한과 목표를 명시한 98개 실행 과제를 통해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9월 출범한 전략위가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100일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한 ‘실행 중심의 국가 전략’이다.

행동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적극 도입해,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가 균형 잡힌 ‘AI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피지컬(P hysical) 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범국가 AI 대전환’도 추진한다. 제조업, 국방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2026년 2분기까지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과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마련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국방 AX(AI 전환)를 본격화한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AI 정보공유·분석센터(AI-ISAC)’도 설립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계를 마련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노동·복지·의료 등 사회 전반에 AI 혜택이 스며들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AI 기본법 개정 협의체’를 구성, 개인정보 및 저작권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임명연 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내년 AI 관련 예산 9조9000억원 중 신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략위는 이번에 공개된 행동계획안에 대해 1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산·학·연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KT, ‘외식·여행·문화’ 풍성한 멤버십 혜택

이달 31일까지 전 등급 고객 대상

KT가 이달 31일까지 전 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12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고 15일 밝혔다.

케이크와 외식, 배달 할인부터 여행·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혜택은 최대 50% 할인된다.

‘달달초이스’는 고객이 11종의 혜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롯데마트 6000원 금액권, 파스쿠찌 홀 케이크 1만원 할인, 더플레이스 35% 할인, 폴라셋 커피 50% 할인 쿠폰, 버거 세트 할인, 배달앱 제휴 할인, 화장품·영화 예매권 할인 등이 포함됐다.

‘달달스페셜’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며 여행·쇼핑·생활 분야 제휴 혜택을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할인, 외식 및 쇼핑 할인, 영화 예매권, 면세점 적



모델들이 KT멤버십 12월 달달혜택을 소개하는 모습.

/KT

립금, 해외여행 상품 할인, 자동차 정비 할인, 게임 할인 쿠폰 등이 마련됐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Y혜택’에서는 영화 굿즈와 라이브시네마 이용권, 렌터카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화 혜택 프로그램에서는 12월 한 달간 뮤지컬과 전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뮤지컬과 전시는 최대 50% 할인된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AI 브리핑’ 검색비중 20% 돌파

최수연 대표, 연말 목표 조기달성
정확도 강화 위해 자료 대폭 확충
향후 생활정보 등 적용범위 확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AI 브리핑’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11일 기준 AI 브리핑 검색 비중이 전체 검색의 20%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사진)가 지난 8월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제시한 연말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한 성과로 평가된다.

AI 브리핑은 방대한 이용자 경험 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사용 맥락에 맞춘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체류 시간과 활용도가 동시에 높아졌



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검색 결과의 신뢰도와 실용성을 강화한 점이 검색 비중 확대에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우주·천문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와 아리랑 7호 위성 발사 이후 관련 관심이 급증하자, AI 브리핑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보 제공에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별 관찰하기 좋은 곳’을 검색하면 단순 위치 정보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운영 요일, 입장료, 주차 가능 여부 등 실제 방문에 필요한 세부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 제공이 가능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실제 방문자 후기

와 현장 경험 데이터가 있다. 네이버는 기존 텍스트 중심 정보에서 나아가, 이용자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검색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확도 강화를 위해 전문 콘텐츠 기반 자료를 대폭 확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과 노출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단순 생성형 답변을 넘어 검증된 정보 중심의 AI 검색을 지향한다는 전략이다.

AI 브리핑 검색 비중 확대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향후 생활 정보, 전문 지식, 취미·여가 영역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검색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